

올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선발

도, 만 18~50세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 대상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만 18~40세 청년창업농도 선발... 후계농에 3억원 지원

전북도가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농을 신규 선발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작년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만18세~50세미만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인이며, 청년창업농의 경우에는 만18세~40세미만 독립 영농

경력 3년이하 농업인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희망자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www.agrix.go.kr)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청년창업농 포함)에게는 최대 3억원 창업자금 지원,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금 80~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 구입, 농업용 시설설치, 축사부지 구입 등 개인에게 필요한 창업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받을 수 있으며, 군 미필 후계농에게는 영농과 병역을 병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의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창업농은 창업자금 지원 이외에

도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월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영농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영농 창업에 관심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전북에 신규 귀농하는 청년농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집중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제1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이기흥, 체육계 성폭력 방관”

문화연대 등 “대한체육회 책임, 사퇴해야” 촉구
대한체육회, 체육계(성)폭력 사태 사과문 발표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폭로되는 것과 관련, 대한체육회장의 책임을 묻는 집회가 열렸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조재범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다. 사건 발생 장소 중 하나가 진천선수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이곳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은 바로 대한체육회이며, 이 회장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16세 소녀가 피눈물을 흘릴 때 이 회장은 어디 있었는가”라며 “성폭력과 폭력 이전에 이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규정도 어기면서 본인 사람들을 체육회로 데려왔다. 이 회장은 책임도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범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체육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길러내는

마을 공동 우물 같은 곳”이라며 “대한체육회에 그 공동 우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수없이 많은 오염물과 쓰레기를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학생들과 선수들을 오히려 병에 걸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 공동 우물은 잠깐 폐쇄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우물을 마시면 끊임없이 병들 것”이라며 “대한체육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의 정화 작업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한국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체육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 관리 감독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하고 정상화시키는 데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쇠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농민 월급 지급 위해 쌀 목표가격 결정을”

평화당 김종희 의원 촉구

국회 농해수위 김종희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 논의를 분리해,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우선 결정하여 2월 안에 변동직불금을 농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쌀 목표가격이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 가격으로, 쌀 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변동직불금 제도에 따라 차액을 농가에 보준해 준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의 평균 쌀 가격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이 결정되면, 2018년 생산된



쌀부터 2022년까지 생산된 쌀에 적용된다. 김종희 의원은 “농식품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2019년 새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농정’의 원년”이며,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집권여당의 행태는 대통령이 농업에 대해 밝힌 의지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

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며 쌀 목표가격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적으로 변동직불금은 1월 쌀 값이 결정된 이후 확정되어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 지급되어 왔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며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농민들 애간장만 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종희 의원은 “정부와 민주당은 쌀 값 안정장치인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겠다는, 쌀 값 안정장치에 대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쌀 값 하락에 대한 분명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쌀 값 하락에 대비한 소득보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은 산소탱크 없이 심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공적인 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재정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직불제 개편 필요 예산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직불제 개편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제시하였지만, 2017년 지급된 직불제 예산만 2조 5천억원이고, 소농에 대한 최저 생계비 지원과 면적과 작물 구별 없이 동일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019년 직불제 예산은 1조 6천억원으로 2017년 지급된 2조 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부족하지 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산불 초기진화 헬기 투입

이달 말까지 '산불 조심기간'

전북도는 산불발생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산불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헬기기종을 선정하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한 헬기투입을 위하여 산불진화 헬기운영 전문기관인 익산산림항공관리소와 14개 시군 산불담당 부서장 등을 선정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조달청 등록기준에 맞춰 등록된 헬기 임차회사의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규격(1,500l~2,000l) 적정성, 안전성 검사 등 조달청 등록기준 등을 심사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헬기의 철저한 운항관리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영상기록 장치 부착을 요구하는 등 신속한 산불상황 판단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탑승인양 능력 및 규격용량 적성성 등 헬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이상기온과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전북도에서는 1월 31일까지 겨울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상전망과 산불발생 여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 결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도 김용만 환경국장은 “산불진화 체계화, 산불 예방·감시활동, 현장 위주의 대응역량 강화 등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산불방지 대책본부 확대 운영, 비상근무 체계 강화 등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